다산포럼

159명의 신원(伸寃)

권 순 긍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일이 역시나, 참담한 결과로 끝났다. 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축제'를 맞아 멀쩡하게 길을 가던 159명의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던가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역사 속으로 묻혀 버렸다. 사건이 일어나고 459일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왜 국가적 대형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저하거나 덮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대형참사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이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예방대책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는 게 수순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시늉만 내고 지원책만 강조하고 있으니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정치적 사건이나 국가적 대형참사는 이제부터는 특별조사를 할 수가 없다. 모든 사건이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 않았던가.

더 큰 문제는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정쟁이 되려면 정치적 입장이 갈려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로 죽은 자식들에 대한 더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어떻게 정쟁이 되겠는가. 그러니 유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냐.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유족들은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길 바라며 삭발과 삼보일배(三步一拜), 오체투지(五體投地) 등 필사적인 호소의 노력을 해왔다. 대한(大寒) 추위가 기승을 부린 1월 22일에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죽은 159명당 100배(拜)를 바쳐 1만 5900배를 밤새워 봉헌하기도 했다. 죽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을 보면 계모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화와 홍련 두 자매의 원귀(寃鬼)가 철산부사 앞에 두 번이나 나타난다. 계모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낙태를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하소연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그래야만 원혼이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이다. 자식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던가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확대 등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바로 추진할 태세다. 생때같은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물질적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상규명이 왜 중요한가. 그날 사람들이 몰릴 것을 알면서도 왜 경찰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고서도 제대로 구호를 하지 못했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는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이런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야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이야말로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의 원혼(寃魂)을 풀어주는 일, 이른바 '신원(伸寃)'인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가협 운영위원장인 이정민씨는 "1년 동안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사정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죽음으로 내몰아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출석시 199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159명의 원혼들을 '국가'는 어찌 풀어줄 것인가?

NGO 칼럼

폐선 푸른길 2.0시대…민관거버넌스로 추진해야

조 진 상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광주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은 광주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만든 '시민의 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시민참여 도시계획의 선두주자이자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덕분에 많은 상을 받았다. 광주전남환경대상, 대한민국 녹색대상 최우수상, 볼보어워드 환경부문 최우수상,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아름다운숲지기상' 등이 예다. 광주의 폐선 푸른길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서울 경의선 숲길과 서울역앞 보행육교공원인 '서울로 7017'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도 했다.

폐선 푸른길은 3년의 커다란 논란 끝에 2000년에 푸른길 조성으로 결론이 났다. 2002년 5월 남광주역 사거리에서 조선대 정문 입구까지 500미터 구간에 첫번째 푸른길 시범사업이 완료되었다. 이후 광주시와 시민들은 꾸준히 푸른길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함께 했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 폐선 푸른길은 새로운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폐선 푸른길을 광주송정역까지 늘리는 것이다. 기존 푸른길이 광주역에서 남광주역-백운동사거리-주월동 방향 11km였다면 이제 반대쪽 절반인 극락강역-광주송정역 12km 구간도 푸른길로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의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2021년에 '광주선 푸른길 더하기 시민회의'를 결성해 활동중에 있다.

막연한 주장으로 들리던 광주선 푸른길 더하기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대도시 도심철도 지하화가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광주시에서도 광주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을 푸른길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존의 선(線)적 공간에 머물던 푸른길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면(面)적 공간으로 확대하는 일이다. 푸른길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푸른길이 푸른길에 머물지 않고 동명동 카페지구로, 아시아문화전당지구로, 충장로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로, 백운광장 푸른길에서 월산공원 등으로 늘려 나가자는 것이다.

광주시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화답하고 있다. 조선대 정문 입구에서 동구청 아시아전당까지 서남로 구간 370미터를 2차선에서 5차선으로 늘리면서 보행 친화거리를 만들고 있다. 차도는 3차선으로 줄이고 기존 보도와 2차선을 보행 공간으로 할애한 것이다.

전남대병원 교차로에서 아시아전당까지의 문화전당로 215미터 구간도 기존 편도 2차선을 5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차도를 기존 2차선으로 묶어 두고 전체 도로를 보차 공존도로 형태의 걷고 싶은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존 선형의 폐선 푸른길을 그물망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21년 12월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걷고싶은 도시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5.8%의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광주시에서 최근 걷고 싶은 길 만들기를 중요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결정이다.

폐선 푸른길 2.0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소기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값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들은 푸른길 1.0 과정에서 광주시와 함께 소중한 지역 자산을 만들어 왔다.

광주는 국내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민간공원 부지의 10% 이내만 건설회사에 내주고 90% 이상의 공원을 지킬 수 있었다. 중앙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20만평 이상의 공원을 추가로 지킬 수 있었다. 광주만의 고유한 슬림형 민간공원 제도 덕분이다. 이런 성과는 광주민간공원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은 결과였다.

광주민간공원의 탁월한 성과에서 보듯이 푸른길 2.0 시대 아이디어를 모으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와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 활동가들,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 고

기후 변화와 식량 주권

오 성 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궁금한 마음에 항상 무엇 사러 가시냐고 여쭈어 봤다. 대부분 뭐 사러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쌀을 사러 가실 때는 '쌀 팔러 간다'고 대답해 주셨다. 어라? 우리 집은 농사도 짓지 않고 시골에서 쌀을 보내 주시기는 해도 먹을 쌀이지 팔 쌀은 아니기에 쌀 팔러 가신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작 집에 오시면 팔러 가신다는 쌀이 쌀집 아저씨 자전거에 실려 오는 게 아닌가.

왜 유독 쌀을 살 때만 '팔러 간다'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딱히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가난한 이웃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설명도 있고 쌀이 떨어졌음을 조상님께 들키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밥상의 주인이기에 나온 표현인 듯하다.

우리 밥상의 주인, 쌀(벼)은 일반적으로 덥고 습한 날씨와 물을 좋아한다. 사계절이 있고 여름에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에서 벼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래에는 쌀 생산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게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농업전망 2024'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장차 다음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기온과 연 누적 일조시간, 연 누적 일사량 평균이 증가하고 대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과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다. 예측이 맞다고 가정하면 먼 훗날 우리 후손은 인디카 계열의 쌀을 먹거나 아니면 카사바나 얌과 같은 식물을 주식으로 삼게 될지 모른다.

문제는 지금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장기적 예측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2023년 겨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북극 한파를 겪는 와중에 유럽은 따뜻한 겨울로 물난리가 났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모 지역의 겨울 축제에 얼음이 얼지 않아 관광객을 제한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는 얼음벌판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른 기상 상황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 양상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특히 날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작년에 수확이 잘 되었던 작목이 올해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내년에는 대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농업도 산업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농업도 지속될 수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투자와 철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면, 농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식량 공급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어떻게 보면 '식량 주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른 나라 손에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농자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현대에 와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으나 농업이 수행하는, 국가의 식량 창고 역할까지 퇴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예견되는 상황들을 본다면 농업이 농업다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민은 농업의 가치를 알아 봐 주고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농업인들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다. 환경에 친화적인 농업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농업 현장을 봤을 때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농업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야 기후 위기 시대에도 지속적인 농업을 통해 우리는 식량 주권이라는 중요한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社 說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홍에 휘청이는 개혁신당

거대 양당 구도를 혁파하겠다며 출범한 개혁신당이 초반부터 내홍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 9일 4개 정파(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가 전격적으로 합당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파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계파 갈등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과 이낙연의 주도권 다툼에서 빚어지고 있다. 주도권 다툼의 원인은 이준석측이 합의문상 법적 대표는 이준석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이낙연측은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에 선거운동 전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후반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측에 제안한 세 가지 요구 가운데 두 가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는 이낙연측이 수용해 문제가 없지만 선거 정책 전반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당직·공천 배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심화됐다. 양측의 갈등은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지속되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폭발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총선 선거 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자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표결 없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급기야 이낙연측에선 합당을 파기하자는 것이냐며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혁신당의 내홍은 정당 지지율이 4~6%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빅텐트를 쳤는데도 컨벤션 효과는 없고 갈등만 노출되다보니 합당 이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체성이 다른 세력끼리 뭉치다보니 이념적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거대 양당 구도를 깨겠다면서도 기존 정당의 폐해인 계파 싸움을 답습하고 있으니 이대로는 중도 표심을 잡지 못한다. 차별화 된 새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개혁신당에게 미래는 없다.

5월 단체 '대국민 선언 갈등' 벗어나 화합해야

일부 5·18 단체가 특전사 단체와 일방적으로 추진한 '2·19 대국민 공동선언식'(이하 선언식)으로 촉발된 5월 단체의 내홍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엊그제 공법단체인 정성국 전 5·18공로자회장이 공로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회장은 공로자회 이사회가 임시 중앙총회를 열고 자신을 해임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정 회장은 애초에 무리하게 추진한 선언식으로 해임을 자초했다.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특전사 단체와 선언식을 강행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주요 징계 사유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5·18부상자회 이사회도 황일봉 회장을 해임했다. 선언식 파문은 5·18 공법 3단체 중 2개 단체장이 공석이 되는 큰 상처를 남겼다.

5·18공로자회와 부상자회가 공동 추진한 선언식과 선언문은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가 선언식에서 "5·18 당시 군 선배들은 상관의 명에 의해 광주 현장에 파견돼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았다.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불렀다. 진압군이 광주에서 질서유지를 했고 희생했다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선언문 폐기를 촉구하며 반발했고 두 공법단체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제명되는 수모를 겪었다.

5·18공로자회와 부상자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동선언식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파기하고 처절한 반성과 새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공법단체로서 특정인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오는 5월이면 5·18 44주년을 맞는 만큼 두 공법단체는 내홍을 서둘러 수습해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말목장터 감나무

네 개의 길이 X자로 교차하는 정읍시 이평면 소재지는 고부와 태인, 정읍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다. 그곳에는 배들 평야의 농산물과 부안 줄포의 수산물이 거래되며 큰 장이 섰다. 말목장터다.

130년 전 말목장터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횃불을 든 역사의 현장이었다. 1894년 2월 15일(음력 1월 10일) 밤 이평면 소재지에서 1.5㎞ 떨어진 예동마을에 농민군들이 모였다. 농민군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지휘 아래 11일 새벽 고부관아를 점령했다. 전봉준은 고부관아로 진격할 때 말목장터 입구 감나무 밑에서 조병갑의 탐학(貪虐)을 열거하고 봉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요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며,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축멸코자 함이라…."

역사학자 고 이이화 선생은 '전봉준, 혁명의 기록'(2014년)에서 "말목장터 감나무에는 해마다 세 종류의 감이 열린다고 한다. 곧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의 감 혹은 전봉준·김도삼·정익서의 감이라 한다"고 감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전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지켜봤던 감나무는 아쉽게도 2003년 9월 태풍 '매미'때 쓰러져 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썩지 않도록 보존 처리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로비에 전시해 놓았다. 원래 자리에는 대체목이 심어져 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고부 농민봉기 재현 행사가 어제 정읍시 이평면 예동마을~말목장터 일원에서 열렸다. 우수(雨水)의 빗속에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이라 쓰인 깃발을 선두로 지도자인 전봉준·최경선·김도삼, 풍물패, 수많은 깃발이 뒤따랐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혁명 이래 강산이 열 세번이나 바뀌었지만 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말없이 서있는 말목장터 감나무와 '사발통문'(沙鉢通文)이 작성된 고부면 신중리 대뫼마을 회관 앞에 세워진 '무명 동학농민군위령탑'이 탐방객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